

광주시·전남대, 이차전지 실무인재 양성 나선다

KIAT와 협약...전국 첫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본격 가동 4년 간 국비 120억 확보...융합전공 개설 등 전문 체계 구축

광주시가 지역 대학, 연구원과 손잡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이차전지 인재양성에 본격 돌입한다.

광주시와 전남대학교,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2일 이차전지 인력양성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교육부의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대학(전남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앞으로 4년 간 국비 120억원을 지원받고 전국 최초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이라는 지위까지 선

점하게 됐으며, 추가로 광주시는 8억원, 전남대는 1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IAT는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관리와 사업비 지급, 단계별 평가 등 이차전지 분야 학사급 인재 양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방향 설정을 제시한다.

전남대학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과 목표 달성 등 사업을 실행하고, 1년마다 50명 이상의 산업 수요형 이차전지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인재양성 사업비 등도 지원한다.

시는 세부 지원사업으로 이차전지 융합전공 개

설 및 운영과 전문장비 구축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우수교원 확보, 기업 연계형 실습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장학제도 운영 등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전남대에서 수행 중인 '이차전지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사업'과 연계한다면, 전문적인 이차전지 인재양성 사다리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대가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이어 올해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사업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푸른길공원이 산림청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다. 4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 푸른길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폐선부지를 활용한 푸른길공원은 여름철 주변 도심보다 3~7도 낮아 열섬 완화 효과가 있고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효과도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호 호수생태원·푸른길공원 '아름다운 도시숲 50' 선정

광주시, 도시숲 25곳 조성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푸른길공원이 '전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에 광주 도시숲 7곳이 참여해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푸른길공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공모에 참여한 전국 916개 도시숲을 대상으로 도시숲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시민이

이용도, 경관적 가치 등을 심사해 최종 50 곳을 선정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어 뛰어난 자연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돼 연간 30만명이 찾는 명소로 받들고 있다.

또 폐선 부지를 활용한 푸른길공원은 동·남·북구에 걸쳐 조성돼 지역 명소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관도 우수해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도시숲은 여름철 주변 도심보다 기온을 3~7℃ 낮춰 열섬 완화 효과가 있고 미세먼지와 탄소저감 효과 등이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도시바람길숲 등 25곳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의 허파인 도시숲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거 절차 공정·신뢰성 확보 최선"

이명기 전남선관위 사무처장

곡성·영광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 기부행위 등 내부 고발 유도 강화 10월 16일 선거...투표 참여 홍보



시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다. 대선 관위에 (사전) 투·개표 상황반도 운영한다.

-이번 재선거 단속 대책은 다르다.

▲곡성은 선거인 수 3만명도 안되는 소규모 농촌지역이다. 은밀한 금품제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전직 군수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데다, 재선거에 뛰어들겠다는 출마 예상자들이 지역 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재선거 일정, 관리 방안, 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 대책 등을 물었다.

-군수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의 위법 행위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보다 더 선거 절차 사무의 공정·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곡성·영광군 선관위에 선거 사무 추진 인력으로 3명씩 파견해 선거 절차 사무의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사전투표 및 개표사무인력 중 일부는 도 및 시·군위원회 전임직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7월 18일부터 선거관리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도 선관위의 경우 선거·지도·홍보·총무부 등 4개 부서 11팀을 구성·운영중이며 외부 단체 대응 등을 전담할 '상황지원팀'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곡성·영광 재선거 위원회별 2개반(선거·지도반)도 편성·운영중이다.

-출마 예정자들이 지역 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다.

▲(예비) 후보자 등록 및 정보공개의 정확성을 위해 전남도 선관위에 심사·확인반을 편성·운영하고 관련 절차 사무의 법정기한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항목, 현안 업무 등을 공유하면서 사전·사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각종 공고·보고·통보 등의

공동 매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 등에서 이뤄질 기부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내부 고발 유도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도시·농촌·도서가 혼재된 지역인 만큼 읍·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선제적 예방활동이 원칙이다. 특히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시·군 선관위에 직원을 파견하고 9월부터 도 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상주토록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재선거 투표를 하라에 따른 대책은.

▲지역사회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재선거 지역 공공기관·단체·기업 등과 협업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령 유권자들을 위한 '내 눈에 속! 돋보기 차트'를 제작·활용하고 지역 커피전문점·식당 등과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 활동도 계획중이다.

-유권자들 역할이 중요하네.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 돈 선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갈 계획을 제시하는지 잘 살펴보고 소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남해안권발전특별법 등 건의...국비 확보 총력

김영록 지사, 예결위·기재부 간담회

전남도가 내년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일 기재부 예산실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일 박정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박정 예결위위원장에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전남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3건의

정책을 건의하고 10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했다.

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관련, "사회간접자본, 관광, 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근거가 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